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도시점 2023. 7. 7.(금) 조간 배포 2023. 7. 6.(목) 09:00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3.4.12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3.7.5일 승인)을 승인
- 직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향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개정·시행(’21.6.30일)한 이후로, 작년에 이어 ’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을 선정(’22.7월)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통보하였다.

[참고]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자체정상화계획 (Recovery plan)		부실정리계획 (Resolution plan)		
① 작성목적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② 작성주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		예금보험공사		
③ 평가승인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④ 위기시 대응	평시	적기시정조치			정리계획
	금융기관 자구책 실행 (발동요건 하회시) · 자본 확충 · 유동성 조달 등	경영개선권고 (BIS<8% 등) · 배당 제한 · 증자 등	경영개선요구 (BIS<6% 등) · 조직 축소 · 임원 교체 등	경영개선명령 (BIS<2% 등) · 주식일부소각 · 제3자인수 등	부실금융기관 지정 (부채>자산) · 자금지원 · 계약이전, 매각 등

'22.7.20일 제1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社は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2.10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3.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3.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참고]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①지배구조, ②핵심기능·사업, ③발동지표·요건, ④위기상황 분석, ⑤자체정상화수단, ⑥상호연계성 분석, ⑦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나리오에 있는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③발동 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조치 (“⑤자체정상화수단” 이행)를 하게 된다. <참고2>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은행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는 등 발동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참고4>

예보는 '22.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3.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7.5일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참고] 부실정리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는 평시에도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부실정리계획은 ①전략적 사업분석, ②정리전략, ③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④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⑤정리가능성 평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보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 <참고3>

심의위원회는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이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내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부실 시나리오상 유동성 위기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리방식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하였다. ☞ <참고4>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UBS에 따르면, 최근 UBS가 위기에 처한 크레디트스위스(CS)를 신속히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시에 마련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덕분에 CS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동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지난 7.5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계획이다.

※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진선영 (02-2100-2910)
		담당자	사무관	정종헌 (02-2100-291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준환 (02-3145-8020)
		담당자	반 장	심서연 (02-3145-8035)
	예금보험공사 대형금융회사관리부	책임자	부 장	윤성욱 (02-758-0541)
		담당자	팀 장	장태욱 (02-758-0542)
			팀 장	김민경 (02-758-0591)
			팀 장	이광섭 (02-758-0537)
			팀 장	정민호 (02-758-0533)



-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감원의 평가 (「금산법」 제9조의3~4, 영 제5조의5)
 -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 ③ 예보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금산법」 제9조의5)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 ④ 금융위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심의 및 승인 (「금산법」 제9조의6~7, 영 제5조의6)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위가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승인) 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
 - ※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 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금산법」 제9조의8~9)
 -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의 해소를 요구
 -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자체정상화계획은 총 7개 부문으로 구성

-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아 위기시 우선적으로 유지해야할 기능·사업을 D-SIFI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위기인식 → 보고·의사결정 → 자구책 집행 등 위기 대응체계 구축

- ① (**지배구조**)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효성 있는 작성, 관리 및 실행이 가능토록 이사회, 임직원 등의 책임·권한 및 업무절차 등 마련
- ② (**핵심기능·사업**) D-SIFI가 제3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주요 기능 및 사업 중 위기 시 우선적으로 유지해야 할 **중요 기능*** 및 사업 선정
 - * 예금, 대출, 도매금융, 지급결제 등
- ③ (**발동지표·요건**) D-SIFI가 위기발생을 인식하고 정상화계획 실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대상(발동지표) 및 동 임계치(발동요건) 설정
- ④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동 계획의 적정성을 D-SIFI 스스로 점검·보완
- ⑤ (**자체정상화수단**)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D-SIFI의 자구책으로 자본 확충, 유동성 조달 등 실효성 있는 건전성 회복방안 반영
- ⑥ (**상호연계성 분석**) 그룹 내부 또는 외부와의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한 상호연계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위기시 영향 등 분석
 - 은행지주의 경우 자회사별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에 따라 ‘중요 자회사’를 선정하고, 위기시 중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 ⑦ (**대내외 의사소통**) 위기시 감독당국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 전략·방안 마련
 - 또한,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및 실행이 가능토록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부실정리계획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

-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아 D-SIFI 정리 시 우선적으로 유지해야할 기능·사업을 예보가 선정하고, 금융안정 및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리전략을 수립
- 정리전략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및 체계적 의사결정체계 등을 수립하고, 부실정리계획 작성과정에서 파악한 정리장애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

- ① (전략적 사업분석)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직·재무·상호연관성 등 고유특성과 중요자회사, 핵심기능·사업·공유서비스 등을 분석하여 정리전략 수립 시 반영
- ② (정리전략)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현행 법령상 실행 가능한 정리전략 등을 검토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추진
- ③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고,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 유지방안을 마련
- ④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질서정연한 정리를 위해 SIFI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과 역할을 정비하고, 차질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금융시장 및 예금자 불안 차단 추진
- ⑤ (정리가능성 제고) 정리전략 추진 시 질서정연한 정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

1. 자체정상화계획

① '22년 보완개선사항 주요 이행결과

- (발동요건) 전년 대비 발동요건 버퍼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고 위기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평가
- (대내외 의사소통) 자체정상화계획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신속한 실행의 관점에서 경영정보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

② '23년 보완개선 주요 필요사항

- (발동지표) 중요 자회사별 고유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할 필요
- (자체정상화수단) 실제 위기상황에서 자체정상화수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조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2. 부실정리계획

① '22년 보완개선사항 주요 이행결과

- (재원조달) 부실상황이 다수 금융기관에 전이되어 정부차입 및 공적자금 조달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
-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자료제출 과정에서 담당임원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 자료 및 분석의 충실도와 신뢰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

② '23년 보완개선 주요 필요사항

- (부실 시나리오) 최근 해외사례를 볼 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도 발생 가능하므로, 차년도 정리계획에는 부실 시나리오 상 유동성 위기 반영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리방식) 금년 고려한 정리방식 이외 보다 다양한 정리방식을 검토하고 최종 정리방식 선정 시,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